

문 대통령 내달 G7 참석 가능하나

靑 “실무선에서 논의중”
북미정상회담 G7 전후 유력
남북회담 성과 지지요청 기회

다음달 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청와대는 7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G7 참석 관련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G7 국가들이 합의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은 G7 전후에 열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G7에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남북 정상회담 지지를 이끌어낼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이 G7에 참석하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보름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회동하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재차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선진국 회의체를 칭한다. 올해 G7은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퀘벡 살르브라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유럽연합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도 자리한다.



“화합을 다져요”

‘익산서동축제2018’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익산시 금마서동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4일 열린 축제 개막식에서 자매결연 도시인 익산시와 경주시가 동서화합과 우의 강화를 위한 합수식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회원국 정상 자격으로 G7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자외교 일정으로 북미정상회담은 G7 이전 또는 이후에 개최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G7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아베 총리도 G7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G7에 참석하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고, 주요 정상과 한반도 현안에 교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올해 G7 개최국인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G7에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지의 뜻을 모아준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한국의 좋은 친구로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겠다”며 “다음달 초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되는 G7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한편 G7은 러시아를 포함해 ‘G8’로 움직였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 촉발에 대한 조치로 G8에서 러시아가 제외됐다. /김진성 기자

이색 선거축제... ‘최고의 배우를 뽑아라’

도선관위, 시민참여 축제 성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 전주시 객사길 삼립광장에서 ‘시민참여 선거축제’를 했다.

전북선관위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유세 퍼포먼스 공연, 투표소 가는길 컬러링, 선거와 관련된 체험 및 놀이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유권자들이 즐겁게 투표소로 가는 모습을 표현한 ‘투표소 가는 길’ 대형 흑백 그림에 시민들이 직접 색을 입히고 투표참여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민참여 퍼포먼스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와 선거를 접목시켜 마동석, 강동원, 최민식 같은 유명한 영화 배우로 분장한 사람들이 영화의 거리를 순회하며 이색적인 선거유세를 펼친 후, 현장에

서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최고의 배우를 뽑는 투표체험 이벤트도 실시했다.

단순한 투표참여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를 현장 개표를 진행해 당선인까지 결정함으로써 일련의 선거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권자 박송희(26, 전주시 삼천동)씨는 “이제까지 선거과정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이색적인 행사를 통해 선거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권리 행사의 즐거움을 주고 지방지치를 꽃피우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5.18 美기밀 국문 번역 마무리

민주화운동 기록관, 오늘~20일 사이 번역본 받아... 진상규명 기여 주목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5·18 전후 미국 군사·외교 기밀문서 국문 번역본 분석에 나선다.

번역본에는 1980년 5·18 당시 신군부와 미국의 관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5·18 전후 전두환씨의 인지를 인정하게 된 배경과 집단발포 배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따르면, 기록관은 오는 8일~20일 사이 5·18 관련 미국 정부 비밀해제 59개 문서 한국어 번역본을 받는다.

번역본은 1979~1980년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에 오간 전문, 체로키 문서, 미국 국방부·중앙정보부(CIA) 기밀문서 등 총 3530쪽 분량으로 팀 셔록 미국 기자가 지난해 1월 19일 광주시에 기증한 것이다.

번역은 군 기록물 관리·분석 전문가가 맡았다. 번역본에는 5·18 사전 기획 배경, 미국이 20사단 광주 투입을 승인해준 경위, 미국의 대한정책과 전두환 승인 과정(12·12 및 5·17군테타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 등)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전두환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에 불만족한다고 공포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자국으로 보낸 5·18항쟁 계엄군 작전 일지도 포함돼 있다고 기록관은 설명했다.

기록관은 번역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미국대사관이 확보했던 계엄군 작전일지와 날짜가 같은 한국군 작전일지를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벌인다.

특히 1980년 5월22일 미국 백악관 최고위급들이 안보를 이유로 신군부가 무력을 잘 썼다며 면죄부를 주고(전씨가)청와대에 임명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백악관 회의록 내용과 유사한 기록물이 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또 ‘계엄군 발포 배후에 전두환씨가 있었다’는 미 국방정보국(DIA) 소속 요원의 보고 내용과 기존의 연구 결과, 번역본 내용 등을 종합해 전씨가 회고록 등지에서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도 규명한다.

한편 5·18 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 연구원은 5·18 당시 미국 대사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의 회고록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두환씨를 압력으로 후원해 5·18 광주 학살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동향

김승환 “교육재정 획기적으로 늘릴 것”

김승환 예비후보가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학부모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완주지역 유세활동 중 “새정부 등장 이후 첫 예산인 2018년도 전북 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15.9%(4539억원) 증가했다”면서 “획기적인 예산증가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3선에 성공하면 매년 10% 이상 교육예산을 증가시켜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개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 국내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신입생 전원 교복비 지원, 특성화고 현장실습비 지원, 전 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에도 과감한 재정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반



유광찬 “자사고 폐지 능사 아니다”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사고의 무조건 폐지는 능사가 아니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및 자사고 폐지를 두고 한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인 확실성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자사고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일반고를 포함한 자사고와 외고 등 모든 고등학교에 공평하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동취재반



천호성 “부실 사학 감시활동 강화”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는 최근 사학지원 및 운영과 관련된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학사문제, 인사문제, 법인재산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 등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한 사학재정지원금에 대한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재정건전화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둘째로, 전북지역의 사학이 수행하는 공익적 책무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하여 “사학의 부조리와 비리가 전북의 교육현장에서 자리할 수 없도록 행정적 예방 및 진단 활동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